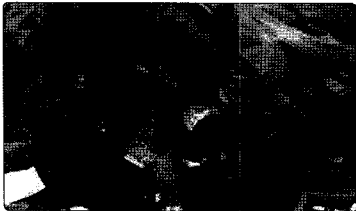


# environment NEWS



## 국내소식

환경부, 'G-20 정상회의' 앞서  
화학테러/사고 상시 대응 태세 완비



환경부는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화학테러/사고 대응태세의 불시점검 및 소속기관별 대응능력 평가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취약시기로 분류되는 지난 8월에는 환경부 소속기관(총 7개)별로 불시에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사고/테러 현장 출동시간, 화학물질 탐지장비 활용 속도, 대처 신속성 등을 점검하여 담당자의 대응능력을 점검한 바 있다. 9월 2~3일, 이틀에 걸쳐서는 종합환경연구단지(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에서 "제2회 화학테러/사고 대응능력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소속기관별 화학사고/테러 대응능력에 관한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은 한강유역환경청, 우수기관으로는 전주시방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이 선정되었다. 환경부는 불시점검과 평가대회 이외에도 3단계에 걸친 유독물 취급시설 점검, 화학사고 대응장비 관리실태 일제점검 등을 통하여 화학사고/테러 상시대응태세 확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에 불시점검 지속 시행, 유관기관 합동 점검, 화학

사고/테러 대응 T/F 구성 운영 등을 통하여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갈 것임을 밝혔다.

### 온실가스/에너지관리목표제 본격 시행

환경부가 관리업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지침>을 지난 8월 30일 고시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9월까지 다량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약 460여개 관리업체가 지정되고, 지정된 관리업체는 내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이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규제 마련을 위해 미국, 호주, 일본 등 선진사례 분석과 부문별 관장기관과 함께 12차례의 산업계 설명회와 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부문별 관장기관을 포함한 관계부처와 함께 실무기술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침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협의하였다. 관리업체에는 사업장 내 생산시설, 부대건물 등의 사무/생활공간, 생산물을 운반하는 차량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부분이 관리대상에 포함되며, 또한 관장기관이 다를 경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이중보고 등으로 인한 업계의 혼선을 예방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이외에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통합하여 이번 9월 말까지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통합 지침이 마련되면 기업체,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설명회와 배출량 산정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세부 업무 설명서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 10월부터 비닐백 NO, 장바구니 OK!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는 5개 대형 유통업체와 함께 <1회용 비닐 쇼핑백(비닐봉투) 없는 점포> 협약을 지난 8월 25일 체결하였다. 협약에 참여한 롯데마트, 메가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 클럽 등 5개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전국 약 350개소 매장에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1회용 비닐 쇼핑백을 판매하지 않게 된다. 대신 다양한 재질과 규격의 장바구니를 제작/보급하고 빈 상자를 제공하는 등 대체수단을 마련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와 각 유통업체는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다양한 규격과 재질로 제작/보급하기로 했다. <1회용 비닐 쇼핑백(비닐봉투) 없는 점포>의 시행으로, 비닐 쇼핑백에 대한 유상판매, 되가져오는 경우 환불, 장바구니 이용고객에 대한 현금 할인 제도 등은 폐지된다. 1회용 비닐 쇼핑백은 우리나라에서 한해 약 160억장이 사용되는데, 이는 국민 1인당

년 간 약 320장을 소비하는 셈이다. 1회용 비닐 쇼핑백은 분해하는데 20년 이상 걸리며 대부분이 매립 또는 소각처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 증가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국내 5개 대형유통업체 약 350개 매장과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들 매장에서 사용하는 1회용 비닐 쇼핑백 사용량은 약 1억 5천 만장인데, <1회용 비닐 쇼핑백 없는 점포 운영>으로 약 75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한 물환경 - 수질통합관리센터 출범**  
상시 수질예보에 의한 수질오염 사전 예방과 실시간 수질오염사고대응을 통한 4대강의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8월 25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질통합관리센터>가 출범하였다. 수질통합관리센터를 통해, 수질오염사고 시 독성 물질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예측/제시함으로써 향후 수질오염사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센터는 국토해양부의 실시간 수위, 댐 방류량 및 환경부의 국가수질자동 측정망 등 방대한 자료를 최신 하천수리모형에 입력하여 실제 하천흐름을 그대로 재현하게 되며, 또한 수질오염사고 시 신속하게 독성물질의 이동시간, 확산농도 및 확산범위를 예측하여 본류유입 차단하고 취정수장 비상운영 등의 초동방제를 지원하게 된다. 수질통합관리센터는 4대강의 주요지점에 대하여 수질변화를 상시 예측하여

수질의 악화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유역청 및 해당 지자체등에 통보하여 배출업소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실시함으로써 4대강의 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수질예보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하고 아울러 실시간 고해상도 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국민들이 수질 변화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게 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금년 하반기에 수질통합센터를 중심으로 유역(지방)환경청, 수질오염방제센터 등 관련기관들이 참여하는 수질오염사고 모의훈련을 거쳐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의 정상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4대강 주요지점에 대한 수질예보는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이때 대국민 수질예보 서비스도 함께 시작할 예정이다.

**북한산에 탐방휴양종합시설 건립**

지난 8월 30일, “북한산 에코빌리지” 건립 착공식이 열렸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연간 950만 명 탐방객이 찾아오는 도심 속 자연공원으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북한산에 생태체험-환경교육이 가능하고, 아토피/천식 등의 환경성질환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탐방휴양종합시설을 건립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국내 유아 4명 중 1명이 천식과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는 등 환경성 질환이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부각되는 실정에서 이번 ‘에코빌리지 설립’은 특히, 환경성 질환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에게 숲에

서의 치유와 건강증진의 기회를 주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일반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생태/문화/역사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건립되는 북한산 에코빌리지는 도시근교형으로서 생태체험센터, 에코룻지(eco-lodge), 생태체험로 등 연면적 2,997㎡으로 총 사업비 156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환경부는 우수생태지역에서 체험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도시근교형 이외 산악형, 해안형 등 테마별 에코빌리지를 국립공원에 우선 건립하고, 향후 생태관광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중이용 실내공기질 점검결과, 3.4% 유지기준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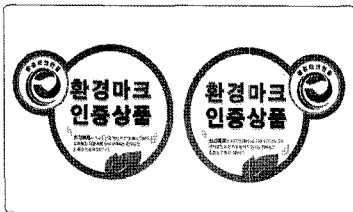
매년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를 파악, 점검하고 있는 환경부는, 2009년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지난해 지하역사, 보육시설 등 총 9,213개 다중이용시설 중 81곳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하고, 자가측정 의무를 미 이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다중이용시설 16%인 1,514 곳에 대해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52개 시설(3.4%)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하였고, 초과시설의 대부분은 보육시설(20개)과 의류기관(18개)으로 총부유세균의 오염이

# environment NEWS



대부분(각각 16건, 13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염물질별 평균오염도를 살펴보면, 미세먼지는 실내주차장(68.0 $\mu\text{g}/\text{m}^3$ ), 지하역사(61.2 $\mu\text{g}/\text{m}^3$ ), 버스터미널(60.9 $\mu\text{g}/\text{m}^3$ )이, 폼알데하이드는 전시품의 영향이 큰 미술관(284.1 $\mu\text{g}/\text{m}^3$ )과 박물관(46.7 $\mu\text{g}/\text{m}^3$ )이, 총부유세균은 보육시설(488.6CFU/ $\text{m}^3$ )이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서 의무를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의 전문성 및 인식이 부족하여 실내공기질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서비스 지원, 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 보급 등을 추진해 가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오염물질별 취약시설군을 선정하여 중점관리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 환경마크 인증제품 표시 강화되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정부공인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유통매장 내 표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종 친환경마크를 부착한 제품들이 범람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환경성 검증 제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환경마크제도는 동일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 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인증하는 국가 공인제도이다.

현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0 $\text{m}^2$  이상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센터,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등에서는 10 $\text{m}^2$ 이상의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하여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판매하도록 되어있고 전국 472개 매장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가전제품, 가구, 건설자재 류 등 대형 친환경상품의 인증이 증가하여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내에 인증제품을 전부 배치하기에는 공간의 제약이 따랐다.

이에 소비자들이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에 진열된 환경마크 인증제품과 일반제품을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두 제품을 같이 진열하여 비교 후 구입이 가능하도록 인증표시를 강화할 계획에 있다. 환경마크 인증제품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매장은 녹색매장 시범운영 매장인 롯데백화점(영등포, 일산, 울산점), 이마트(연수, 고잔, 산본점), 홈플러스(영등포, 월드컵, 부천여월점), 롯데마트(춘천, 평택점) 11개 점포이고, 내년 부터 전국매장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녹색매장 지정제도는 환경친화적 매장운동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유통매장을 녹색매장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도입된다.

## 실외 놀이터 일부 시설 유해물질 검출, 대책마련 필요

환경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실외 놀이터에 대한 환경안전 진단사업을 실시('09. 2~12)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환경안전 진단사업은 놀이터 관리 주체들로 하여금 해당시설의 환경안전관리 수준을 확인하고, 정부에서는 관리 주체 스스로가 안전관리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이다. 이번 안전진단을 실시한 놀이터는 환경보건법 시행('09. 3. 22) 이전부터 설치/운영 중인 실외 놀이터 340개소이며, 관리주체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곳이다. 조사한 결과 340개소 중 284개소(84%)가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진단항목 1개 이상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환경안전진단 사업에서 환경안전기준을 초과한 놀이터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에게 놀이터에 칠하는 도료 및 마감재 등에 친환경제품의 사용, 노후 시설 개량 및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걱정 관리하도록 우선 권고하였다. 이번 진단결과를 급년도 안전진단사업에도 반영하고 "친환경 놀이터 가이드라인 개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보강" 등 정책개발 및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 DMZ일원 '보호지역' 5개소 지정 추진

환경부는 DMZ 일원 우수 생태습지

및 특이한 경관/지형지 등을 ‘습지 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DMZ 일원 “보호지역” 지정계획>을 수립(’10. 8. 30)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추진한다.

60여년 가까이 사람 손이 닿지 않은 DMZ 일원은 ‘자연천이(自然遷移)와 ‘자연복원’ 과정을 거쳐 높은 생태적/학술적 가치를 갖게 되었고, ‘생태 평화 지역’의 상징이자 세계적 ‘생태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에 대해 부처별/지역별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있어, 보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 동안 유지되어 왔던 생태적 가치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생태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지역에 대하여는 ‘별정 보호지역’로 지정하여 국가적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3년(’07~’09)에 걸쳐 DMZ 일원 습지, 산림, 초지 등의 자연환경 연구/조사결과, 특이한 지형/지질, 생물종 다양성, 수리수문 기능 등의 측면에서 30개소가 보호지역 지정 가치가 있는 곳으로 판명됐다

이번 계획에 따라 환경부는 1차적으로 ’11년까지 임진강하구(장단반도, 초평도), 양의대, 토교저수지, 화진포호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백암산 일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한반도 내륙 횡단축인 ‘DMZ

생태축’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후세에 세계적 생태문화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별도 계획에 따라 ‘국립공원’ 및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질 개선 위해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강화**

환경부는 건설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건설기계를 제도적으로 보완/정비하고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기계는 일반자동차에 비해 등록대수는 2%에 불과하지만 미세먼지 발생량은 전체 차량의 19.9%를 차지해왔다. 그간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건설기계의 경우 경유자동차에 비해 배출허용기준치가 완화(13~15배)되어 있었고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배출가스 관리가 미흡했다. 반면 건설기계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대형화, 노후화 되어 등록대수(2%, 36만대)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량(19.9%)이 아주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기계에도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2011년부터 건설기계의 제작단계부터 배출가스를 관리하고 있는 9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중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대해 출고당시 배출가스 미규제 차량(Tier-0, EURO-0 등) 위주로 저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등 단계별로 저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2012년까지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검사방법을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기계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며, 운행되고 있는 노후 건설기계에 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신형 엔진 교체, 엔진 정비 등 저감사업 추진에 따라 대기질 개선은 한층 가속화 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보완책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소식**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



온실가스도 줄이고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도 꾀할 수 있는 일본의 크레딧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 environment NEWS



손경식)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함께 지난 8월 31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광립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일본의 크레딧 제도를 벤치마킹하면, 대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자금을 중소기업에게 확산할 수 있고 산업계 전반의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크레딧 제도'의 도입을 역설했다. 크레딧제도란 대중소 협력을 통해 달성된 중소기업의 감축량을 대기업의 감축목표량에 활용함으로써 대기업 입장에서도 윈윈효과를 보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실제로 일본은 2008년에 이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413건의 배출사업을 달성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7월 열린 '한일상공회의소 수뇌회의'에서 일본상의가 추진하고 있는 크레딧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상호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제도보완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배출권거래제는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면서 "자칫 중복규제와 이중부담으로 이어져 산업부문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도 축사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식이 아닌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9명의 전문가들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국내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 제100차 녹색성장환경기후위원회 기념식



국내 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민간 위원회인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녹색성장환경기후위원회가 100회를 맞이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8월 25일 소공동 조선포텔에서 제100차 녹색성장환경기후위원회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권문식 대한상의 녹색성장환경기후위원회 위원장(캐피코 사장), 권영박 서부발전 전무, 백승호 두산중공업 전무, 백재봉 삼성엔지니어링 전무, 조갑호 LG화학 상무 등 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인기 국회의원,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문정호 환경부 차관,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박태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등 관계기관장들도 참석, 축하를 해주었다. 이날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 환경과 경제의 상생이라는 신성장패러다임 하에서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새로운 기회로 삼는 기업이 성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위원회가 기업의 녹색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녹색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정호 환경부 차관도 "앞으로도 환경 관련 정부정책 및 법제·개정시 사전에 위원회를 통해 산업계와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고 산업계와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문식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앞으로 위원회는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기업들이 녹색시장을 선점해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에너지업, 제조업, 엔지니어링/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분과를 만들어 업종간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녹색 기술 개발, 녹색산업 육성 등 신사업 발굴 지원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녹색성장환경기후위원회는 지난 2000년 8월 대한상공회의소내 환경안전위원회로 15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출범한 후 현재 발전, 철강, 건설, 정유, 제조, 서비스, 유통 등 전 산업을 망라해 녹색성장환경기후위원회로 그 규모를 확대했다. 그간 위원회는 기업이 당면한 환경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 왔으며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대변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해 왔다.